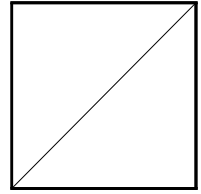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6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4. 29. (제 8 차)	

(주)J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4. 29.

1. 의결주문

(주)J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2018.1.22.~2018.2.2. 및 2018.9.12.~2018.9.18. 기간 중 (주)JB금융지주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8조 제2항(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43조 제2항(과태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 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0.3.12.) 심의필

<별지>

(주)JB금융지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2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과평가기준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

○ 법적 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43조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조치사유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JB금융지주는 2016.10월~2018.2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 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된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①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②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8조 제2항(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43조 제2항(과태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1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 ⑤ (생략)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생략)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 ④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의2. (생략)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10. (생략)

③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2017.10.19. 개정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모. 법 제25조제6항(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6호	3,000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에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 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 2017.10.19. 개정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JB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0.4.0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200만원 부과, 개선사항 1건, 경영유의사항 5건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 (주)JB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

※ 조치내용 중 개선사항 및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주)JB금융지주는 2016.10.~2018.2.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이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 배당이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❶ 총자산이익률이 0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❷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이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관계 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나. 개선사항

(1) 감사부장 선임 절차 불합리

내규 「그룹내부통제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는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내규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직무는 집행기구와 다른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감사위원회 규정」은 경영진이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감사부장) 인사를 결정한 후 감사위원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감사조직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및 독립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둠

**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적 동의를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정함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 부장에 대한 임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다. 경영유의사항

(1) 사외이사 선임 절차 공정성 강화

내규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하는데도

동 위원회의 위원인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후보군의 상당수 (73.3%)를 추천하고 이중 2명을 주주총회에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외부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추천경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내규 「사외이사 운영 규정」에 의하면 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등 회의 자료를 회의일 1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6년~2018년 기간 중 총 19회차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회의 안건을 사외이사에게 최장 6일 지연(평균 3.6일) 송부하여 안건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임원 선임 및 후보자 추천 시 자격요건 검증 강화

지주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2016.3.25. 임원 선임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과거 조치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서 법규상 자격요건으로서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라면 그 소속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누락된 양식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 등 임원 자격요건 검증절차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 추천 시 해당 후보가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2016.2.24. 신규 임원 후보자 추천 시 해당 후보자가 그룹 내 재직경험이 없어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전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증을 완료한 사례가 있으므로

임원 선임 및 후보자 추천 시 관계 법규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강화

내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의하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외부의 추천 등을 통해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후보군을 육성하며 최종 후보 자격을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회사 임원만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외부의 추천 등을 활용한 사례가 없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2016.3.25. 대표이사 선임 시에는 최종후보자에 대한 면접도 실시하지 않는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 추천 및 육성절차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영승계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급기준 정비

내규 「임원성과 평가 및 보상 규정」에 의하면 보수위원회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경영목표와 이행정도 등을 비교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경영목표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기에 미흡하고,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단기성과지표로 위험가중자산수익률(RORWA)을 새롭게 추가 적용하면서도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반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에 위험가중자산수익률 평가배점만을 추가로 기재하여 보수위원회에 부의하고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성과평가지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기재하고, 개정취지 및 개정사항의 검토결과 등을 보수위원회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주는 내규 「임원성과 평가 및 보상 규정」에 성과보수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급 반납절차 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정함이 없고,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성과급 반납과 관련한 환수기준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성과보수 환수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관련 내용이 모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833 02-2100-2836	02-3145-7205